

Naksungdae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Series

한국의 소득분배

김 낙 년

Working Paper 2013-06

February, 2013

Naksungdae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5, Bongcheon-ro 31, Kwanak-gu,

Seoul, 151-843, South Korea

한국의 소득분배*

김낙년(동국대)**

<요 약>

본고는 한국의 소득불평등이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어느 수준이고 어떻게 추이해 왔는지를 검토하였다. 먼저 가계조사에 의거한 통계청의 소득분배 지표가 상위 소득자의 누락과 금융소득 등의 과소 보고가 심각하며, 이를 보정할 경우 지니계수가 상당히 높아져 한국은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나라에 속함을 보였다. 1990년대 중엽에는 OECD 국가 중에서 중간 정도의 수준이었던 지니계수가 그 후 10년간 급등하였고, 최근에는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 본고는 또한 소득불평등의 장기 추이를 보여주기 위해 소득세 자료에 의거한 상위 1%의 소득집중도를 제시하였다. 소득집중도는 해방 전후기에 급락한 후 낮은 수준으로 안정되어 있다가 1990년대 중엽 이후 급속히 상승하는 U자형의 양상을 보였다. 그리고 1990년대 중엽 이후 심화된 소득불평등의 요인으로서 저임금 국가와의 교역 확대를 포함한 세계화의 진전과 숙련편향적 기술변화로 고용증가가 둔화되는 등 성장효과가 저변으로 확대되지 못한 점을 들었다. 이것은 고도성장기와는 달라진 현상이다. 또한 최상층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빨리 높아진 요인으로서 외환위기 이후 기업경영에서 성과주의 보수체계가 확산된 점과 1980년대 이후 상위 소득자에게 적용된 한계세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점을 들었다.

* 이 글은 서울대경제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가 주최한 '한국형 시장경제체제의 모색'이라는 학술 심포지엄(2013년 2월 28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발표될 원고이다.

**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nnkim@dongguk.edu)

한국의 소득분배

I. 머리말

- 본고는 두 가지 과제를 다룬다. 하나는 한국의 소득불평등이 어느 수준이고 어떻게 추이해 왔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통계청의 공식 통계가 있지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일관된 계열이 짝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편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여기서는 종래의 가계조사에 의한 접근과 함께 새롭게 소득세 자료에 의한 접근을 추가함으로써 좀더 다양한 시각에서 우리나라 소득분배의 실태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소득불평등의 수준이 국제적으로 비교하여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보다 장기에 걸쳐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 또 하나의 과제는 위의 실태 파악을 전제로 하여 특히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에 소득분배 양상이 단절적인 변화를 보인다는 점에 주목하고, 그러한 변화를 가져온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 이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II절에서는 먼저 통계청의 소득분배 지표가 어떤 편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보정할 경우 지니계수 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제시한다. III절에서는 소득세 자료에 의거하여 상위 소득층(예컨대 상위 0.1%, 1% 등)이 전체 소득의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제시하고, 국제비교의 관점에서 한국의 특징을 검출한다. 나아가 가계조사와 소득세 자료를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전체 계층의 소득분배 추이를 제시한다. IV절에서는 이상에서 밝혀진 1990년대 중엽 이후 소득불평등의 급속한 악화를 가져온 요인이 무엇인지 고찰한다. V절은 이상을 마무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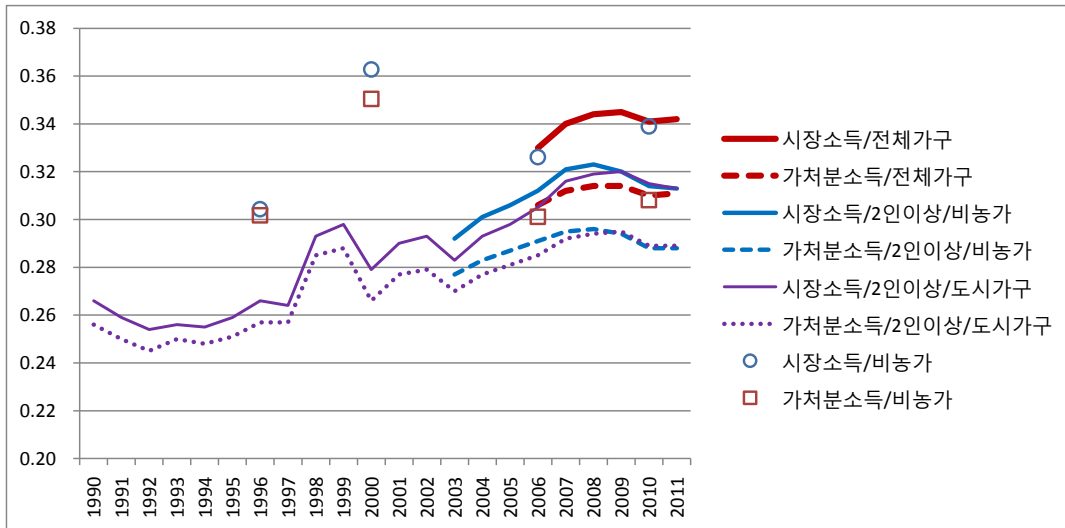
II. 가계조사에 의한 접근

1. 통계청의 소득분배 지표

- 여기서는 먼저 통계청이 발표해온 우리나라 소득분배 지표가 실태와 상당히 동떨어져 있을 수 있다는 의문을 제기한다.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에 의거하여 소득분배 지표(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를 발표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 지표의 조사대상(커버리지)이 처음에는 도시 근로자 가구(2인 이상)로 한정되었다가 1990년 이후에는 도시 자영업자 가구(2인 이상)를 포함하게 되었고, 2003년 이후에는 비 도시 가구(농어가 및 1인 가구 제외)를, 나아가 2006년 이후에는 1인 가구(농어가 제외)를 포함하도록 확대되어 왔다. 현재 통계청의 홈페이지(KOSIS)는 도시 근로자 가구(2인 이상)의 경우 1979년까지 소급하여 소득 10분위별 통계를 제시하고 있지만, 지니계수 등의 분배지표는 1990년 이후로 한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 <그림 1>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지니계수의 추이를 전술한 조사대상의 범위별로 보인 것이다. 가장 계열이 긴 것은 도시 가구(2인 이상)이고,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지니계수는 2006년

이후로 계열이 짧다. 여기서 전체가구는 1인 이상 가구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가계조사에서 제외된 농가를 별도의 농가경제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보완한 것이다. 그리고 지니계수는 대상 소득의 범위에 따라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두 가지로 제시되고 있다¹. 시장소득에 의한 지니계수가 가처분소득보다 높은 것은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반영하고 있다. 양자의 차이가 최근으로 올수록 벌어지고 있어 소득재분배 효과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1> 통계청의 지니계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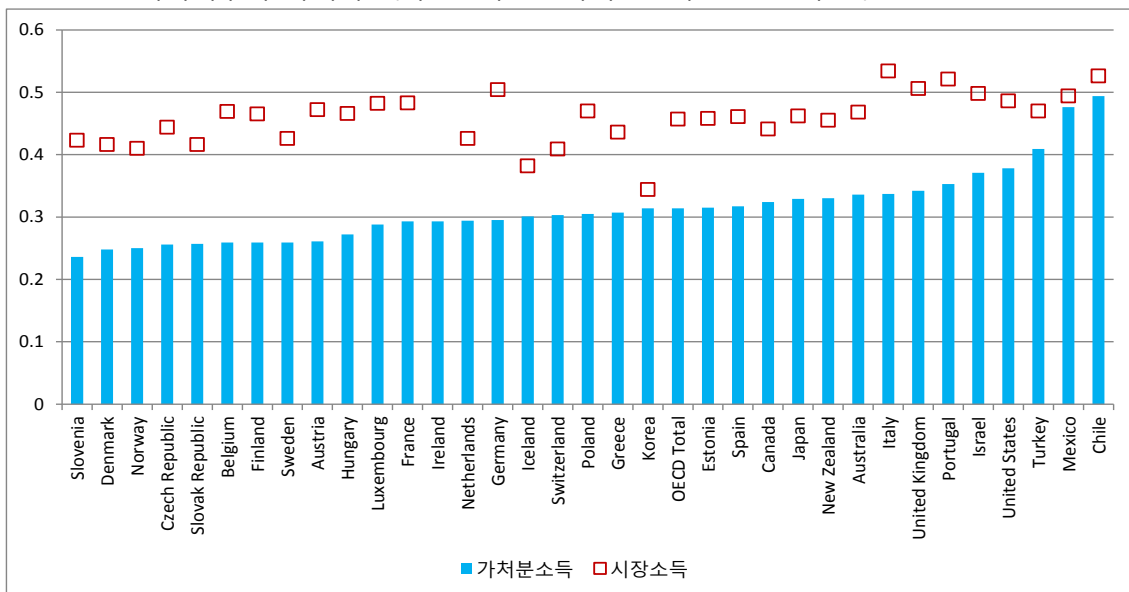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KOSIS; 『가구소비실태조사』(원자료); 『가계동향조사』(원자료).

- 이상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의거한 것인데, <그림 1>에는 통계청이 1996년 2000년에 실시한 가구소비실태조사에 의거하여 산출한 지니계수를 추가하여 제시하였다. 이 조사는 농가를 제외한 전체 가구(1인 가구 포함)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2006년 이후의 가계동향조사와 커버리지가 동일하다. 따라서 조사 커버리지가 같은 점에서는 가구소비실태조사와 2006년 이후의 가계조사가 연결 가능하다. 여기서는 1996, 2000년과 일관되게 비교할 수 있도록 2006년과 2010년을 선정하여 농가를 포함하지 않는 지니계수를 산출하여 제시하였다.
- 이상을 전제로 하여 <그림 1>에서 먼저 읽을 수 있는 것은 지니계수가 1990년대 이후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으며, 2000년대 말부터 정체 내지 감소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사대상의 커버리지가 높아질수록(즉 계열이 짧을수록) 지니계수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비 도시 가구 또는 1인 가구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았음을 뜻하며, 이들을 포함할 경우 앞 시기의 지니계수는 더 높은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지니계수 계열이 긴 것은 조사 커버리지가 낮기 때문에 그 수준과 추이가 실태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알기 어렵다.
- 그런데 <그림 1>에서 동그라미나 네모로 나타낸 4 시점(1996, 2000, 2006, 2010년)에 한정하

¹ 시장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의 합계로 정의되며, 가처분소득은 시장소득에 다시 공적 이전소득(공적 연금, 기초노령연금, 사회수혜금, 세금환급금)을 더하고 비소비지출(경상조세, 연금, 사회보험)을 공제하여 구한다.

여 보면 전체 가구(농가는 제외)를 커버한다는 점에서 일관된 비교가 가능하다. 그에 따르면 시장소득(동그라미)과 가처분소득(네모) 간의 지니계수 격차가 후기로 갈수록 커진다는 점은 가계동향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되는 점이다. 그렇지만 지니계수의 수준과 추이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예컨대 2000년의 지니계수는 가계동향조사에 비해 단순히 조사 커버리지의 차이로 설명될 수 없는 정도로 격차가 벌어져 있다. 그 결과 1996-2000년간의 지니계수 상승은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비해 매우 가파르며, 2000-2006년간은 거꾸로 지니계수가 크게 감소하여 가계동향조사 결과와 모순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통계청의 두 가계조사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실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두 조사 결과간의 이러한 부정합 또는 모순은 어디에 기인하는 것일까? 여기서는 이 문제를 천착하기로 한다.

<그림 2> 지니계수의 국제비교(시장소득 vs. 가처분소득, 2000년대 말)



자료: OECD(<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INEQUALITY>)

- 그 전에 통계청의 지니계수를 다른 나라와 비교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야기되는지를 언급해 두기로 한다. <그림 2>는 2000년대 말 시점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국가의 지니계수를 제시한 것이다. 통계청의 소득분배 지표 중에서 전체 가구를 커버하는 OECD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그림 1>의 2006년 이후 계열에 한정된다. 먼저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한국의 지니계수는 0.314이며, OECD 국가들의 평균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종래 소득불평등의 국제비교에서 한국의 위상이 OECD 국가의 중간 정도의 수준이라는 일반적인 인식은 바로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다.
- 그렇지만 <그림 2>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시장소득 기준의 지니계수는 0.344로 되어 있는데, 전체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가장 낮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지니계수가 가처분소득 기준에서는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으로 나온 것은 한국이 소득재분배의 효과(그림 2에서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갭으로 측정되는)가 멕시코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림 2>는 전체 인구에 관한 것인데, 이를 65세 이하의 생산연령인구와 65세를 넘는 노령인구로 나누어 보면, 노령인구에서 가처분소득 기준의 지니계수는 멕시코와

칠레 다음으로 높은 대신 생산연령인구에서는 지니계수가 약간 낮아진다. 양쪽의 어느 경우든 시장소득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지니계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온다. 그것도 OECD의 다른 나라는 아이슬란드를 제외하면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가 모두 0.4를 넘고 있는데, 한국은 그보다 훨씬 낮은 이상치(outlier)로 보인다.

- 과연 시장소득 기준으로 한국의 불평등도가 가장 낮다는 <그림 2>의 통계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만약 한국의 시장소득 지니계수가 다른 나라보다 낮은 0.4 정도라고만 해도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소득불평등도는 3-4위의 수준으로 뛰어오르게 된다. 이처럼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기준의 두 지니계수 사이의 갭이 미미한 것은 한국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그 정도가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작다는 것이 과연 사실일까?
- 요컨대, 한국의 가처분소득 기준 불평등도가 OECD 국가들 중에서 중간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와 같은 두 가지 극단(즉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와 소득재분배 효과가 모두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한다는)이 서로 상쇄된 결과이다. 이 국제비교에 사용된 한국의 통계는 <그림 1>의 2006-2011년에 걸친 전체가구의 지니계수인데, 과연 그것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앞에서 1996-2000년의 가구소비실태조사와 2006년 이후의 가계동향조사 결과간의 모순을 지적했는데, 그 원인을 구명하기 위해서는 두 조사의 원자료 자체를 검토할 필요가 제기된다.

2. 기존 지표의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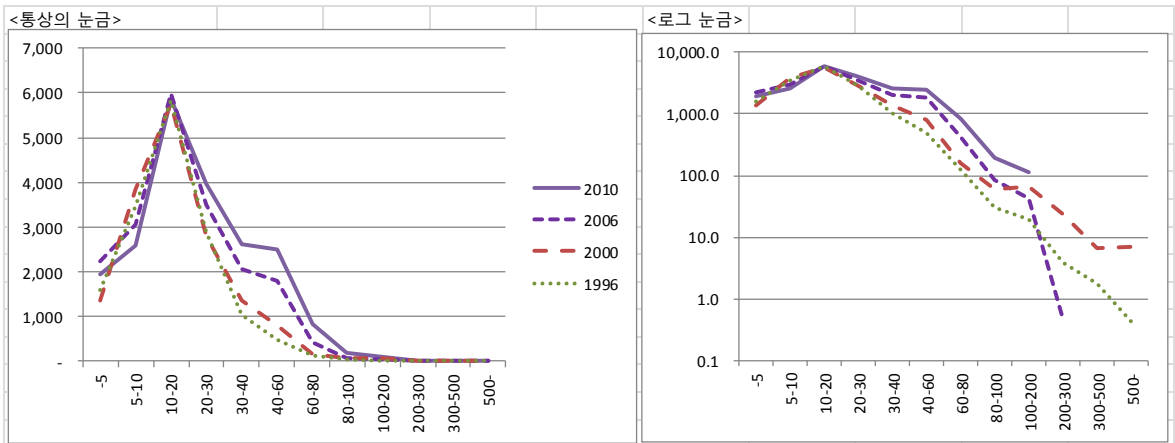
- 먼저 통계청의 소득분배 지표가 의거하고 있는 가계조사의 특성과 한계를 소득세 자료와 비교해 보기로 한다. <표 1>에서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가계조사는 표본조사이지만 소득세 자료는 소득세를 납부한 자들의 전수를 집계한 통계라는 점이다. 후자의 문제는 면세점 이하의 소득자들이 모두 빠진다는 점, 원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득구간별로 집계된 통계만을 알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그 동안 소득세 자료가 소득분배를 분석할 때 본격적으로 이용되지 못했던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관심을 상층의 소득자에게 한정할 경우 소득세 자료가 가계조사보다 월등하게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또 하나 종래 가계조사는 소득세 신고에 비해 과소 보고의 유인이 크지 않다고 생각되어 왔고, 그 점에서 탈세의 문제가 있는 소득세 자료에 비해 우위에 있다고 생각되어 왔다. 그렇지만 후술하듯이 상위 소득자의 경우 가계조사와 소득세 통계를 비교해 보면, 가계조사의 과소 보고 문제는 심각함을 알 수 있다. 과소 보고에 대한 유인이 소득세 자료에 비해 낮다고 할 수 있지만, 가계조사는 그에 대한 벌칙도 사실상 없기 때문에 그를 막을 길이 거의 없다. 그 외에 가계조사의 무응답 비율이 20%에 달하고 있는데, 그들은 주로 소득이 높은 가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도 그러한 왜곡을 가져온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특히 상층의 경우에는 가계조사의 과소 보고 등의 편향이 얼마나 있는지를 소득세 자료를 준거로 하여 평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가계조사와 소득세 자료의 비교

	가계조사	소득세 자료
조사 단위	가구	개인
데이터의 성격	표본조사 (5000-10000 가구)	소득구간별로 전수가 집계된 통계
조사에서 빠진 부분	1인 가구 등	면세점 이하 소득자
과소 보고		
유인	있음	있음
벌칙	없음	있음
조사의 한계	무응답 가구	탈세
원자료	이용 가능	불가능
일관된 계열	짧다	길다
국제비교	가능	가능
불평등지표	지니계수 등	소득집중도

- 먼저 가계조사 결과가 상층 소득자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를 검토하기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접근을 해 보고자 한다. 첫째, 조사대상의 범위가 동일한 두 가계조사(가구소비실태조사와 가계동향조사) 결과인 1996, 2000, 2006, 2010년을 대상으로 하여 소득구간별 소득자의 분포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비교해 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서 가구 단위로 조사된 소득을 개인 기준으로 바꾸고자 한다. 두 가계조사는 모두 가구주, 배우자, 기타 가구원으로 나누어 각각 어떤 종류의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얼마나 얻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주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을 거치면 이를 개인별 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림 3> 가계조사 자료의 소득구간별 인원수 분포 비교(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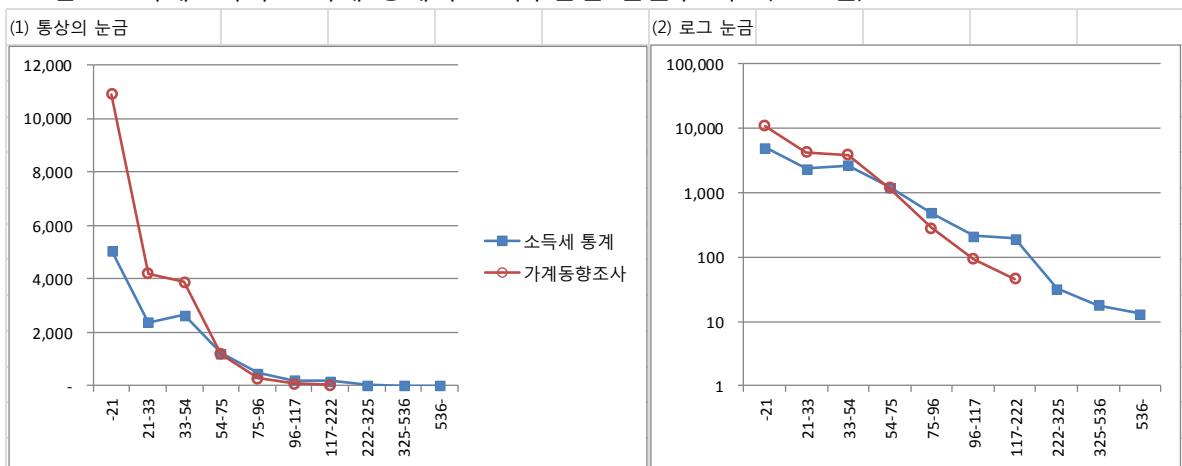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원자료); 『가계동향조사』(원자료).

- <그림 3>은 이렇게 구한 각 연도의 개인별 소득이 소득구간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비교한 것이다. 그림의 X축은 개인별 연소득(단위: 백만 원)을 12개 소득구간으로 나누었으며, Y축은 각 소득구간별로 인원수의 분포를 보여준다. 각 연도의 소득구간은 동일하게 설정되었으며 그 해의 명목소득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4개 연도 모두 소득자가 가장 많은 구간은

1000-2000만원 구간이며, 그로부터 1억원 구간까지는 최근 연도로 올수록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각 연도 사이에 명목소득이 늘어난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1억원 이상 소득구간에서는 그 현상이 오히려 거꾸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즉 <그림 3>의 로그 눈금을 보면 1996-2000년의 경우는 1억 이상의 각 구간에서 소득자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가계동향조사가 시행된 2006년과 2010년에는 그 이전 시기에 비해 파악된 소득자가 줄었거나 아예 누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실질소득이 아니라 명목소득으로 비교해도 그러하다는 것은 상위 소득자의 누락이 이보다 더욱 심각함을 뜻한다. 2006년 이후의 가계조사는 1인 이상 가구를 포함하는 등 조사를 개편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상위 계층의 소득 파악은 가구소비실태조사에 비해 오히려 후퇴한 것을 알 수 있다.

- 그런데 각 연도의 가계조사 결과를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어느 쪽이 얼마나 과대 또는 과소 평가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가계조사 이외의 소득 자료에서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찾을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두 번째 방법으로서 두 가계조사의 소득분포를 소득세 자료에 의거하여 평가해 보기로 한다. 국세청의 소득세 자료는 과세 대상 인원수와 그들의 소득금액을 소득구간별로 집계하여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면 <그림 3>과 같은 소득구간별 인원수 분포를 구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이용할 때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하나는 소득세 자료에는 과세 미달자가 제외되기 때문에 상층의 소득을 파악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지만 소득이 낮아짐에 따라 통계에서 누락된 자들이 급속히 늘어난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소득세 통계로 소득분포의 전모를 보이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 자료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².

<그림 4> 가계조사와 소득세 통계의 소득구간별 인원수 비교(2010년)



주: Y축은 인원수(단위: 천 명)이고 X축은 소득구간(단위: 백만 원)을 나타낸다.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원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김낙년(2012a).

- <그림 4>는 2010년의 가계조사와 소득세 자료에 의한 소득분포를 함께 제시하였는데, 다른

²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 자료를 통합할 때에는 양자가 중복되는 부분을 추정하여 제외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김낙년(2012a)의 추정 방법을 따랐다.

해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지면의 제약을 고려하여 생략하였다. 통상의 눈금과 함께 상위의 소득분포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로그 눈금으로도 제시하였다. 이것과 <그림 3>과의 차이는 소득구간이 덜 세분되어 있고, 연도에 따라 구간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소득세 자료의 경우 원자료에 접근할 수 없고 『국세통계연보』에 실려 있는 소득구간별로 집계된 인원수와 소득금액 통계만을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소득세 통계의 소득구간³을 전제로 하고, 거기에 맞추어 가계조사의 소득분포를 다시 집계한 것이다.

- <그림 4>에서 가계조사의 소득분포가 실태와 얼마나 괴리되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소득세 통계에 의한 소득분포가 된다. 물론 소득세 통계에도 탈세로 인한 누락이 있을 수 있다. 근로소득의 경우 고용주에 의해 원천 징수되기 때문에 탈세의 가능성이 미미하지만,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납세자 자신의 소득신고에 의거하고 있어 과세당국이 파악하지 못해 탈루되는 소득이 어느 정도 존재할 것으로 생각된다⁴. 따라서 <그림 4>의 소득세 통계에 의한 소득분포 인원수는, 정확한 탈루 규모를 알 수 없지만 그 부분만큼 과소 파악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실제 인원수의 최저한이라고 할 수 있다.
- 이에 따르면 54-75(백만 원) 소득구간을 경계로 하여 그 이상의 소득구간에서는 소득자들이 상당히 과소하게 파악되었거나 아예 누락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계동향조사의 이러한 문제는 전체 연도에서 대동소이하게 나타난다. 2006년에는 가구소비실태조사를 중단한 대신 가계동향조사의 조사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표본을 개편하였지만, 상위 소득구간에서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문제는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그림 3>에서 알 수 있듯이 1996, 2000년의 가구소비실태조사는 가계동향조사보다 상위 소득자를 훨씬 더 많이 파악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을 전제로 해서 보면, <그림 1>에서 본 2000-2006년의 지니계수의 급락은 실태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 3>과 <그림 4>에서 드러난 자료상의 문제에 기인할 가능성이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006년 이후의 지니계수도 상위 소득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과소평가되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2> 가계조사에서 파악된 금융소득

	1996	2000	2006	2010
전체 표본수	24,290	23,720	12,458	10,667
저축액이 0보다 큰 표본 비율 (%)	97.4	92.5		
금융소득이 0보다 큰 표본 비율 (%)	21.8	37.8	7.4	9.3
파악된 금융소득 (조 원) A	6.59	9.94	2.16	2.46
전체 금융소득(국민계정, 조 원) B	37.58	42.43	37.61	50.19
비율 (%) A/B	17.5	23.4	5.7	4.9

³ 소득세 통계의 소득구간은 실제로는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 자료를 통합하고 소득구간을 급여총액 기준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조정이 이루어진다. 구체적인 절차에 관해서는 김낙년(2012a)을 참조.

⁴ 2010년의 경우 소득세 통계로 파악된 개인소득이 국민계정에서 파악된 대응 소득의 92%를 차지한다. 이를 소득종류별로 나누어 보면 임금 및 급여는 97.4%, 이자소득은 98.7%, 배당소득은 92.1%, 사업소득은 74.3%로 나타났다(김낙년 2012a: 99). 사업소득의 경우 적지 않은 소득의 탈루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주: 1)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 소득의 합계이다.

2) 1996, 2000년은 가구소비실태조사, 2006, 2010년은 가계동향조사이다.

- 한편, 가계조사는 금융소득(이자와 배당)을 제대로 파악되지 못했다. <표 2>는 가계조사가 파악한 금융소득을 전체 금융소득(국민계정으로부터 가계에 귀속되는 금융소득을 추출)과 비교해 보면, 가구소비실태조사에서는 20% 전후를 파악하였지만, 가계동향조사에서는 5% 전후에 불과하여 오히려 후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의 과소 파악이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 그런데 가구소비실태조사는 금융소득 이외에 저축액⁵도 함께 조사하였는데, 이를 금융소득과 비교해 볼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저축액이 0보다 큰 것으로 나와 있는 표본 가구의 비율은 1996년과 2000년에 92.5%와 97.4%였지만, 금융소득이 0보다 큰 표본 가구의 비율은 같은 해에 21.8%와 37.8%에 불과하였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가구가 다소라도 금융소득이 존재하지만, 많은 가구가 이를 아예 기입하지 않았거나 기입하더라도 어림짐작으로 과소 기입했으리라 생각된다. 가계동향조사의 경우에는 저축액을 따로 조사하지 않았지만, 금융소득이 0보다 큰 경우가 2006, 2010년에 각각 전체 표본가구의 7.4%와 9.3%에 불과하다. 금융소득의 과소 보고가 더욱 심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금융소득이 상위 소득층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한다면, 이렇게 과소평가된 가계조사의 금융소득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소득분배 지표가 왜곡될 수 있다.
- 이상과 같이 가계조사 결과를 소득세 통계나 국민계정 통계와 비교해 보면, 상층 소득자에서 표본의 누락이 심각하며, 금융소득의 경우도 상당히 과소 보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통계청의 지니계수가 불평등을 과소 평가하는 편향이 큼을 말해준다. 여기서는 이러한 편향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정하기로 한다. 구체적인 것은 김낙년·김종일(2013)을 참고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추계의 아이디어와 결과만을 제시하기로 한다.
- 먼저 상층 소득자의 누락은 다음과 같이 보정하였다. <그림 4>에서 가계조사에서 아예 누락된 최상위 3개 소득구간(222-325 백만 원 구간 이상)에서는 소득세 자료의 인원수와 소득을 그대로 채택하여 가계조사 자료에 추가한다⁶. 가계조사에서 파악된 인원수가 소득세 자료보다 적은 소득구간(그 이하에서 54-75 백만 원 구간까지)은 가계조사의 인원수를 소득세 자료의 인원수와 일치하도록 가중치를 늘려 주었다. 마지막으로 54-75 백만 원 미만 구간에서는 가계조사의 수치를 채택한다. 다만, 앞에서 상위 소득구간의 인원수가 새롭게 추가되거나 늘어났기 때문에 그 이하의 소득구간에서는 가중치를 늘어난 비율만큼 일률적으로 줄여주었다. 그 결과 가계조사의 당초의 전체 가중치(즉 인원수)는 변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 보정 방법은 다른 해에도 대체로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 그 다음 누락된 금융소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정하였다. 먼저 1996, 2000년의 경우 과

⁵ 저축액은 조사 시점에서의 총저축 보유액인데, 여기에는 은행권 저축(요구불 및 저축성), 비은행권 저축, 신탁, 보험권 저축, 유가증권, 계 불입금, 빌려준 돈이 포함되어 있다.

⁶ 이들은 개인이지만, 가구주로 간주한다. 그리고 지니계수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가족 수에 관한 정보가 없지만, 가계조사에서 파악된 최상위 계층의 평균 가족 수를 이들 누락 구간에도 적용하기로 하였다.

소평가된 원자료의 금융소득보다는 파악률이 훨씬 높은 저축액을 이용하기로 한다. 즉 각 가구의 금융소득액과 저축액이 비례한다는 가정 하에 금융소득 총액을 각 가구에 배분하는 방법으로 가구당 금융소득을 추정하였다. 저축액이 금융소득의 원천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방법이 실태를 크게 왜곡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2006년과 2010년의 경우에는 가계조사에서 저축액이 조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이용하기 어렵다. 그 대신에 가계의 금융실태를 조사한 『가계자산조사』(2006년)와 『가계금융조사』(2010년)의 원자료를 이용하였다. 즉 이들 자료의 저축액을 기초로 추정된 금융소득과 경상소득의 통계적 관계를 해당 년의 가계조사의 가구별 경상소득에 적용하여 추정하는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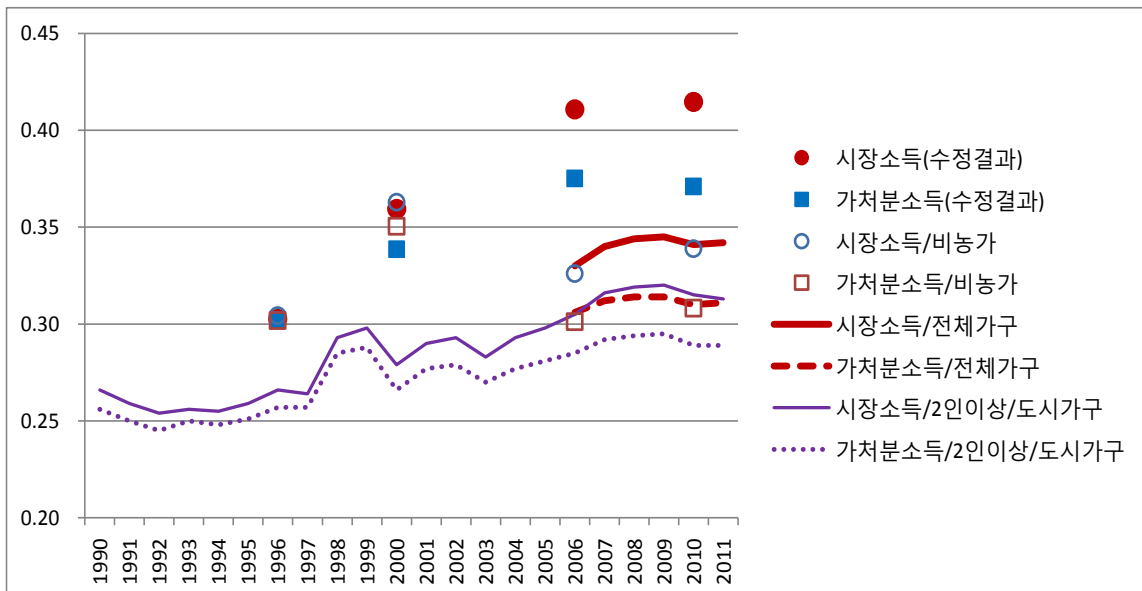
- 그런데 2010년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하면 추가적인 보정이 가능하다. 최상층의 경우 이를 통해 대부분의 금융소득이 파악되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위의 추정 방법이 특히 최상층의 금융소득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최상층으로 갈수록 배당소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위의 추정식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2010년의 경우 최상층 3개 소득구간은 금융소득종합과세 자료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자료가 없는 다른 해는 이들 3개 소득구간의 경우 금융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2010년의)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그 이하의 소득구간은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융소득을 배분하는 것으로 하였다.
- 이상은 시장소득에 관한 것인데, 그로부터 가처분소득을 구하기 위해서는 비소비지출을 빼고 공적 이전소득을 더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가계조사는 이들 항목에서도 실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비소비지출 중에서 경상소득세를 보면 가계조사가 파악한 것은 11조원인데, 국세청이 징수한 소득세 총액 29조원⁷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여기서는 이러한 갭을 전면적으로 보정하지 않고 특히 과소 파악되고 있는 최상위 3개 소득구간의 소득세를 보정하는데 그쳤다. 비소비지출에는 그 외에 국민연금 기여금과 건강보험료 등이 있고, 여기서도 가계조사의 과소 파악이 나타나지만, 이를 보정할 정보가 없어 그대로 두었다.
- 한편, 공적 이전소득에서는 공적 연금, 기초노령연금, 사회수혜금 등이 있는데, 여기서도 적지 않게 과소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계조사에서 또 하나 문제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조사된 가처분소득이 그 가구의 소비지출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구가 적지 않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논리상으로 모순되며, 만약 가계의 소비지출 조사가 소득조사보다 과소보고의 유인이 적어 실태를 좀더 반영하는 것으로 본다면, 조사에서 누락된 소득이 적지 않게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고에서 가계조사의 커버리지 한계나 과소보고를 문제로 삼을 때 소득세 통계를 비교의 기준으로 삼았는데, 그것은 상위 소득층의 경우에는 유효하지만 그 이하 소득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 여기서는 가계조사의 이러한 모순이 공적 이전소득을 포함한 여러 가지 소득 항목에서 소득의 파악이 불충분하였기 때문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이를 보정하는 방법으로 가처분소득이 소비지출액의 1/2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구는 그 소비지출액의 1/2을 그 가구의 소득액으로 가정하기로 한다. 여기서 1/2로 한 것은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소비지출의 일부를 과거의 저축액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단순

⁷ 2010년의 전체 소득세 징수액 37조원 중에서 경상소득세라 할 수 없는 양도소득세를 제외하여 구했다.

한 가정에 불과하다. 다만 이를 통해 특히 하위 소득층의 일부 가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소득 조사의 부실함을 다소 보완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 이상의 각 보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원래의 지니계수가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변하는가를 보일 수 있지만, 지면의 제약으로 생략(구체적인 것은 김낙년·김종일 2013 참조)하고 그 결과만을 제시하기로 한다. 물론 이상의 보정은 자료의 제약 때문에 불충분하게(또는 최소한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결과로 얻은 지니계수는 상당히 크게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먼저 앞의 <그림 1>에서 통계청의 지니계수와 함께 수정된 결과를 제시하면 <그림 5>가 된다. 여기서의 초점은 1996, 2000, 2006, 2010년의 4 시점에서 수정 전과 후의 비교이다. 먼저 1996년의 경우 통계청의 지표(그림 5에서 속이 빈 동그라미와 네모 표시)와 이를 보정한 지표(그림 5에서 속이 찬 동그라미와 네모 표시)가 큰 차이가 없으며, 시장소득(동그라미 표시)과 가처분소득(네모 표시)의 차이도 미미하다. 2000년의 경우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기준의 지니계수 차이가 다소 벌어지기 시작하였다는 점, 통계청의 지표가 수정결과보다 다소 과대평가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2006년의 경우 가계동향조사에 의거한 통계청의 지니계수와 여기서 수정된 지표간의 차이가 현격하게 벌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통계청 지표와는 거꾸로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기준의 지니계수가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두 기준의 갭(그림에서 동그라미와 네모간의 갭)도 수정결과가 통계청 지표보다 좀더 크게 벌어졌다. 마지막으로 2010년의 수정결과도 2006년과 마찬가지로 통계청 지표와의 현격한 갭이 유지되고 있다. 중요한 차이는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완만하지만 상승을 지속하고 있는데 비해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감소로 돌아선 반면, 통계청 지표에서는 그러한 동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림 5> 통계청의 지니계수와 수정결과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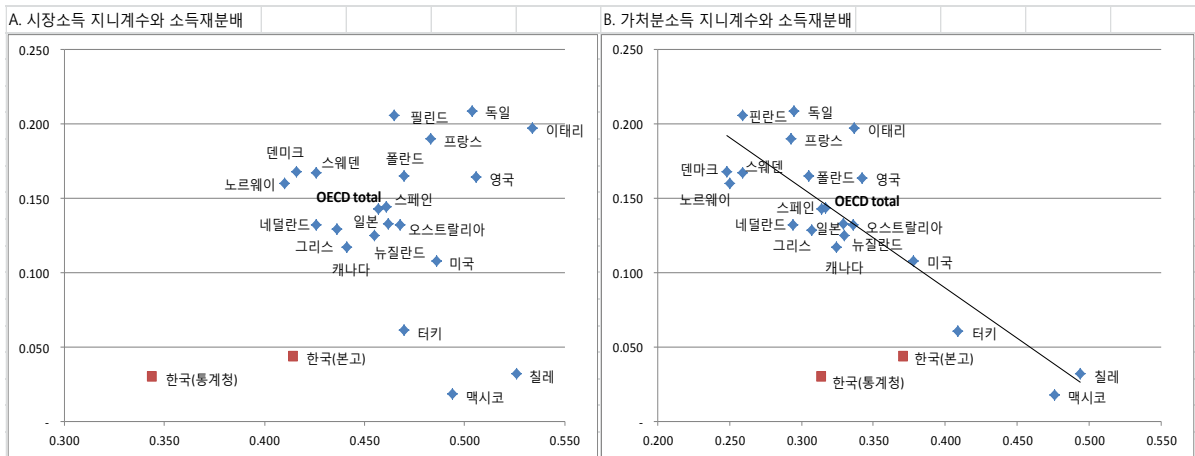


- 이상에 비추어 볼 때 가구소비실태조사는 비교적 실태에 접근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가계동향조사는 2005년 이전에는 조사 커버리지가 낮다는 문제를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1인 가구를 포함하도록 개편된 2006년 이후에도 실태와 동떨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보정한

결과, 지니계수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고, 그 추이도 통계청의 지표와 적지 않게 달라졌다. 수정결과에 따르면 지니계수가 1996-2006년의 10년간에 걸쳐 급속하고 일관되게 상승하였다는 점,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는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지니계수간의 갭이 벌어지고 있지만 통계청 지표는 이를 다소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점, 2000년대 후반에는 시장소득 지니계수의 상승폭이 크게 둔화되었고 특히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감소로 돌아섰다는 점이 주목된다. 참고로 제시한 1990년까지 소급되는 통계청의 지니계수는 2인 이상의 도시가구에 한정되어 국제비교의 기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가계동향조사의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다. 따라서 본고의 수정결과, 비록 매년의 지표를 제시할 수는 없었지만, 지난 15년간의 소득불평등의 수준과 추이를 보다 잘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 그러면 수정된 지니계수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떨까? <그림 6>은 2000년대 말의 시점에서 OECD 주요 국가의 지니계수를 비교한 것이다. 지니계수를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누면 양자의 차이는 그 나라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먼저 그림 A는 X축이 시장소득 지니계수를, Y축이 소득재분배 효과(즉 두 지니계수의 차이)를 나타내는 2차 평면 위에서 각국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림 B는 X축을 시장소득 대신에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로 바꾼 것 이외에는 그림 A와 동일하다. 이를 통해 소득불평등에서 각국의 상대적 위상을 가늠할 수 있다.

<그림 6> 지니계수의 국제비교(2000년대 말)



자료: OECD(<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INEQUALITY>);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이를 검토하기 전에 먼저 통계청의 지니계수와 이를 수정한 본고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언급해 두기로 한다. 그림 A를 보면 통계청(그래프의 '한국(통계청)')의 시장소득 지니계수가 이상치(outlier)라 할 정도로 다른 나라와는 현격하게 떨어져 있었던 것이 수정된 결과('한국(본고)') 여전히 낮은 편이지만 이상치의 영역으로부터는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 소득재분배 효과는 수정 결과 다소 높아졌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편 그림 B를 보면, 통계청의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가 OECD 국가의 중간에 위치한 것으로 나온다. 그렇지만 그것은 시장소득 지니계수가 그림 A와 같이 이상치의 영역에 있었고, 소득재분배 효과도 매우 낮았다는 두 가지 요인이 서로 상쇄된 결과일 뿐이다. 그림

A의 이상치가 수정됨에 따라 그림 B의 지니계수도 크게 상승하였다. 그 결과 한국은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OECD 국가 중에서 노르웨이에 뒤이어 가장 불평등도가 낮은 나라에 속하지만, 소득재분배 효과가 멕시코, 칠레에 이어 3번째로 미미하여,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는 칠레, 멕시코, 터키, 미국에 이어 5번째로 불평등도가 높은 나라로 역전된다. 이하에서 한국의 지니계수는 통계청의 지표 대신에 본고에서 수정된 결과를 가지고 논하기로 한다.

- <그림 6>의 A에서 시장소득 지니계수(X축)와 소득재분배(Y축) 수준의 높고 낮음을 기준으로 그룹을 나눈다면 각국의 소득불평등의 양상을 4개로 유형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의 특성을 드러낼 수 있다. 먼저 북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그룹은 시장소득 불평등도 낮으면서 소득재분배도 크게 진전되어 있는 유형1이라 할 수 있다. 독일, 프랑스, 이태리, 영국 등의 유럽 국가를 포함하는 그룹은 시장소득 불평등은 높지만 소득재분배도 크게 이루어지는 유형2가 된다. 이에 대해 칠레, 멕시코, 터키 등이 속하는 (크게 보면 미국까지 포함하는) 그룹은 시장소득 불평등이 높지만 소득재분배가 크게 진전되지 못한 유형3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시장소득 불평등도 낮지만 소득재분배도 별로 진전되지 못한 유형4로 분류할 수 있다.
- 그림 B에서 제시된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의 분포는 그림 A의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소득재분배 효과가 결합된 결과를 보여준다.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유형1의 국가가 가장 낮고, 뒤이어 유형2, 그리고 유형3의 순서로 점점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소득재분배 효과는 그림 A의 시장소득 지니계수와는 달리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사이에는 유의미한 추세선이 나타나고 있다. 가처분소득 기준의 불평등을 낮추는 데에는 소득재분배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에 대해 유형4의 한국은 그림 B의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보면 유형2와 유형3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만약 한국에서 소득재분배를 크게 강화한다면 유형2에 접근할 것이고, 소득재분배는 그대로인 채 시장소득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면 유형3에 접근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Ⅲ. 소득세 자료에 의한 접근

1. 소득집중도

- 그런데 가계조사의 경우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최근의 일이고, 그 이전에는 조사에서 배제되는 가구가 많았다. 따라서 가계조사의 대표성이 높으면서 일관된 계열은 의외로 짧다. 통계청의 가계조사가 전체 가구(농가 제외)를 커버하게 된 것은 2006년 이후에 한정되며, 1996년과 2000년의 두 해가 거기에 해당될 뿐이다. 이에 대해 소득세 자료로 접근할 경우 소득집중도(상위 0.1% 또는 1%가 전체 소득의 몇 %를 차지하는가)에 초점을 맞추면 매우 장기에 걸친 소득불평등 지표를 얻을 수 있다.
- <표 3>은 소득집중도를 구하는데 이용되는 소득세 통계를 예시한 것이다. 소득세 통계는 납세자수와 신고 소득을 소득구간별로 제시하고 있다. 소득세 자료는 시기에 따라 과세 제도가 바뀌고, 과세 대상자의 범위도 일정하지 않지만, 최상층이 과세 대상으로 포함되는 것에는 변화가 없으며 그들의 소득은 소득세 자료로 거의 파악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소득세 자료는 전체 소득자수와 그들의 소득(control total for population and income)에 관한 정보를 주지 않는다. 소득세 자료에서 빠지는 과세 미달자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control total

에 관한 정보는 다른 자료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여기서는 기존연구에 따라 인구의 경우 20세 이상 인구를 취하였고, 소득의 경우 국민계정의 개인소득을 이용하였다. 이들 인구 및 소득의 control total은 상위 몇 %의 인구가 전체 소득의 몇 %를 차지하는지를 계산할 때 각각의 분모로 이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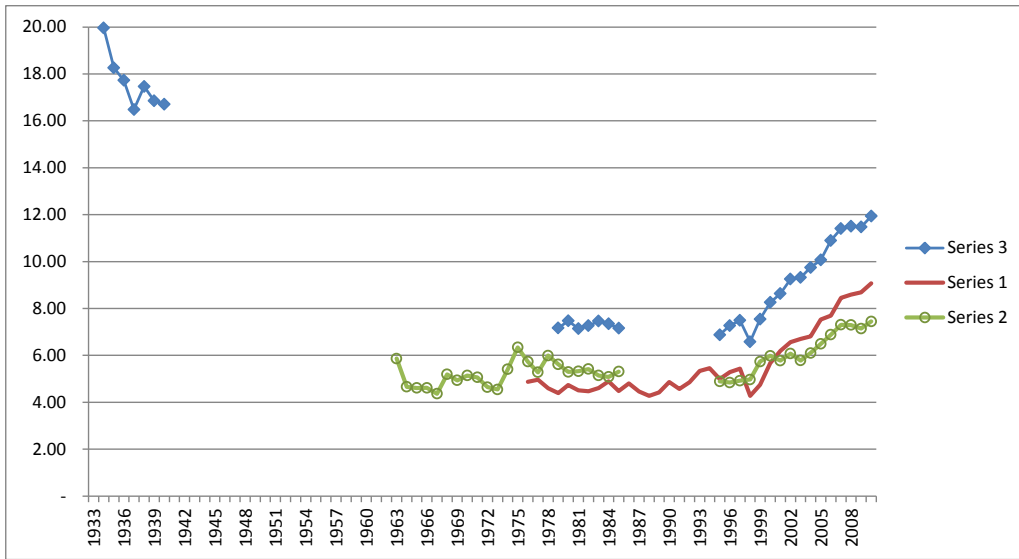
<표 3> 소득세 통계의 예시와 인구와 소득의 control total과 Pareto 계수 (2010)

소득구간		납세자수	신고 소득	평균소득	control total 인구 / 소득		누적 비율 (%)		Pareto 계수	
하한	상한	천명	조원	백만원	천명	조원	인구	소득	b	a
백만원		A	B	B/A	C	D	$\sum A/C$	$\sum B/D$		
	21	5,060	56	11			31.47	67.23		
21	33	2,373	61	26			18.48	58.47	2.46	1.68
33	54	2,640	110	42			12.38	48.89	1.99	2.01
54	75	1,222	77	63			5.60	31.70	1.70	2.42
75	96	490	41	84			2.47	19.67	1.74	2.36
96	117	212	22	105			1.21	13.21	1.86	2.16
117	222	195	29	149			0.66	9.73	2.05	1.95
222	325	32	8	263			0.16	5.18	2.36	1.73
325	536	18	7	405			0.08	3.85	2.44	1.69
536		13	17	1,324			0.03	2.72	2.47	1.68
Sum		12,256	429		38,946	638				

주: A, B를 포함한 왼쪽의 5열은 소득세 통계, C는 인구통계(20세 이상 인구), D는 국민계정(개인소득)에 의거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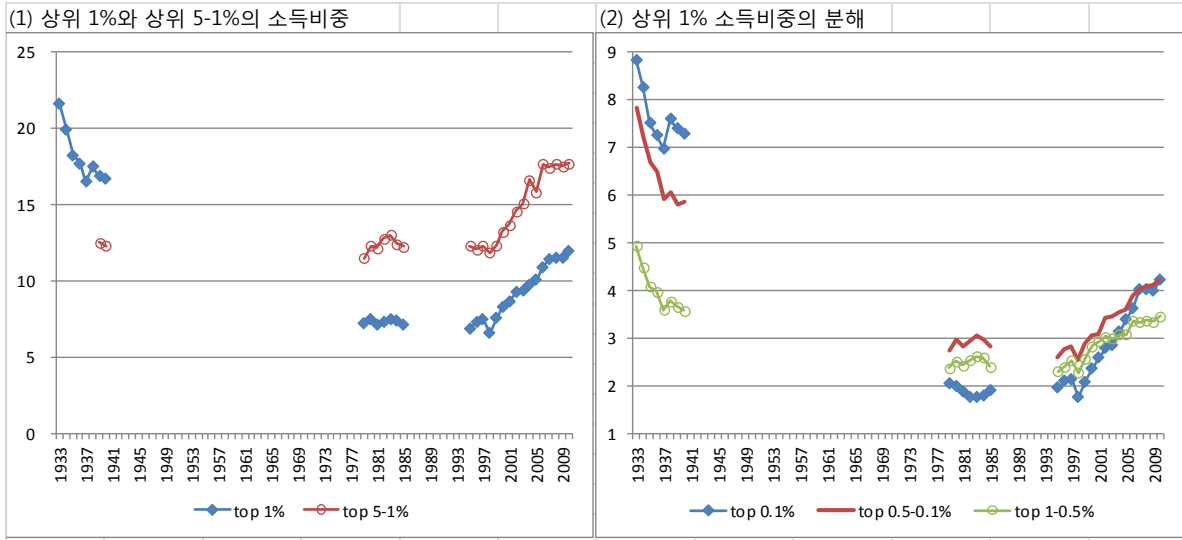
- <표 3>에는 이 control total과 상위 소득구간의 납세자수 및 신고소득을 이용하여 누적 비율을 제시하였다. 예컨대 96-117 (백만원) 소득구간의 경우 상위 1.21%가 전체소득의 13.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접한 117-222 (백만원) 소득구간의 경우 상위 0.66%가 전체소득의 9.73%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소득세 자료는 소득구간별로 집계된 통계만을 이용할 수 있기(또는 원자료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로부터 예컨대 상위 1%가 차지하는 소득비중을 직접 구할 수 없다. 이를 위해 상위의 소득구간은 Pareto 분포에 따른다는 가정을 하여 위에서 예시한 두 소득구간의 사이에 있는 상위 1%의 소득비중을 추정하게 된다. 이를 Pareto interpolation이라고 하며 구체적인 것은 기존연구(Piketty and Saez 2001; 김낙년 2012a)를 참고하기 바라고, 이하에서는 추정 결과만을 제시한다.
- <그림 7>은 이상의 방법으로 구한 상위 1%의 소득비중을 보인 것인데, Series 1은 종합소득세 자료만으로 구한 것이며, Series 2는 근로소득세 자료만으로 구한 것이다. Series 3은 두 자료를 결합하여 구한 것이며 본고의 최종 결과가 된다. 다만 근로소득(Series 2)의 경우 소득집중도를 구할 때 control total for population and income은 전술한 전체 소득의 경우와는 달리 근로자수(상용, 임시, 일용 근로자수의 합계)와 전체 임금소득으로 하였다(구체적인 것은 김낙년 2012b를 참조). 그리고 1975년에 도입된 종합소득세는 신고대상자의 포괄범위가 좁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Series 3은 이를 감안하기 위한 것이다.

<그림 7> 자료별 상위 1%의 소득집중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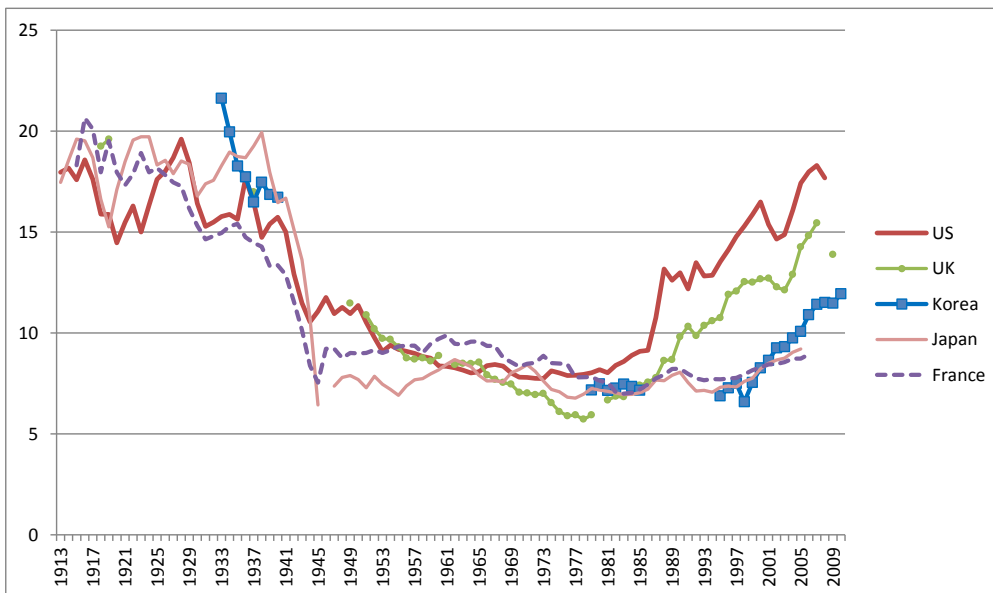


- <그림 7>에서 Series 3은 종합소득 과세제도가 실시되지 않거나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추계가 불가능하여 공백으로 남겨둔 기간이 적지 않다. 그렇지만 소득의 커버리지가 낮은 Series 1과 Series 2의 추이를 보면 Series 3의 공백 기간도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한국의 소득집중도는 해방 전까지 포함해서 보면 해방 전의 높은 수준에서 해방 직후 크게 하락한 후 낮은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추이하다가 1990년대 중엽 이후 다시 급속히 높아지는 U자형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그림 8>의 (1)은 상위 1%와 그 이하의 4%(즉 상위 5-1%)의 소득비중을 비교한 것이다. 거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상위 5-1%의 소득비중은 전전과 전후에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을 보인데 비해 상위 1%의 경우는 수준이 현격하게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것은 두 시기의 소득집중도 차이가 주로 상위 1% 이상의 최상위층의 문제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림 8>의 (2)는 이 상위 1% 그룹을 다시 세분하여 상위 0.1%, 그 이하의 0.4% 그룹(즉 상위 0.5-0.1%), 다시 그 이하의 0.5% 그룹(즉 상위 1-0.5%)의 소득비중을 비교하였다. 여기서도 소득이 최상위 그룹으로 갈수록 전전과 전후의 격차가 더욱 벌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전전에는 상위 0.1% 그룹이 그보다 인원수가 4-5배 더 많은 그 이하 그룹보다 소득비중이 더 높았는데, 전후에는 역전되어 이 그룹의 소득비중이 가장 낮았다. 그런데 이 상위 0.1% 그룹이 최근에는 소득비중이 급속히 상승하여 세 그룹 중에서 가장 커질 정도로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전에 비해 이들 그룹간의 격차는 크게 줄었지만, 상위 1% 내의 3 그룹의 소득비중 순위가 전전과 같은 순위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최근 15년간에 걸쳐 각 상위 소득그룹의 소득집중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최상위로 갈수록 그 경향은 더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8> 상위 소득집중도의 추이



<그림 9> 상위 1% 소득집중도의 국제비교(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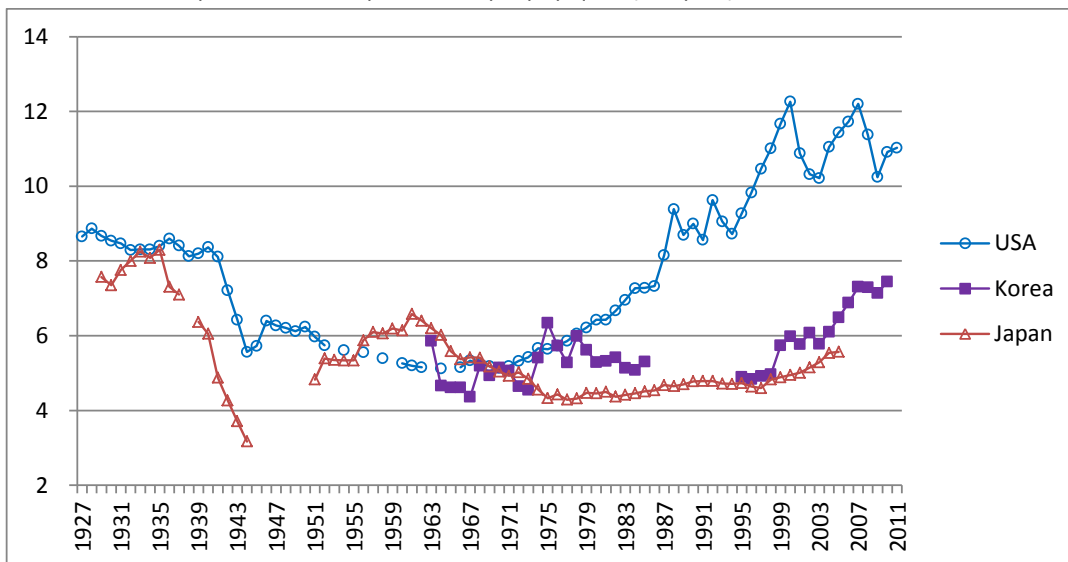


자료: The World Top Income Database; 김낙년(2012a; 2013b).

- 한국의 소득집중도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자. <그림 9>에 따르면, 각국의 소득집중도는 전전에 높은 수준에 있던 것이 전후 크게 하락한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체로 유사한 추이를 보였다. 다만 1980년대 이후에는 소득불평등이 급속히 높아지는 영미형과 이전의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유럽·일본형으로 분화가 나타났다. 그 속에서 한국의 소득집중도는 1990년대 중엽까지는 유럽·일본형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외환위기 이후 급등하여 영미형으로 접근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은 현재 두 유형의 중간 수준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그림 10>은 근로소득에 한정된 상위 1%의 소득집중도를 미국 및 일본과 비교한 것이다⁸. 그에 따르면,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높은 수준에 있다가 전후 급속히 하락하여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한 후 1970년대 이후 급속히 상승하여 전전의 수준을 크게 넘어서는 U자형을 보였다. 일본도 전전의 높은 수준에서 전후 급속히 하락한 것은 미국과 동일하지만, 1960년을 전후하여 상승과 하락을 수반하면서 대체로 낮은 수준에서 안정(최근에는 상승 기미가 나타나지만)되어 있다. 1960년을 전후한 상승과 하락은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상황에서 부족한 상황으로의 전환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Moriguchi and Saez 2008). 그 결과 미국은 1970년대 이후 소득집중도가 급속히 상승한 데 비해 일본은 안정되었다는 점에서 뚜렷한 대조가 돋보인다. 한국의 경우는 1970년대 중엽을 전후한 상승과 하락의 추이가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고도성장기에는 대체적으로 5% 대의 수준으로 추이하여 미국보다는 일본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외환위기 이후에는 한국의 소득집중도는 급속히 상승하여 최근에는 일본과 유사한 수준에서 이탈하여 집중도가 높은 미국 쪽으로 한걸음 다가선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0> 상위 1% 근로소득 집중도의 국제비교 (단위: %)



자료: Piketty and Saez(2003); Moriguchi and Saez(2008); 김낙년(2012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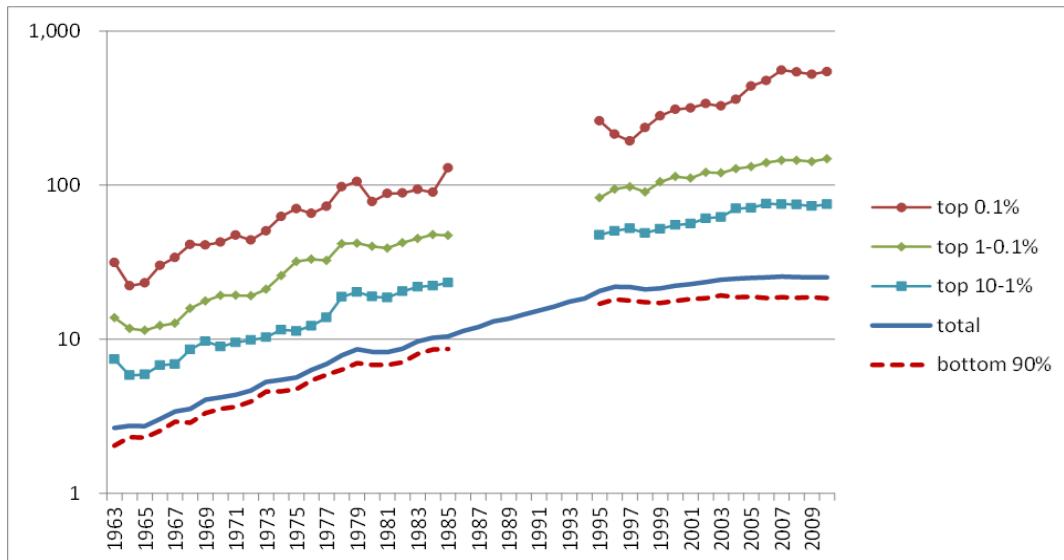
2. 소득 계급별 근로소득 추이

- <그림 11>은 소득 그룹별로 1인당 근로소득(2010년 불변가격)의 추이를 비교하였다. 소득

⁸ 이 때 다음과 같은 차이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한국과 같이 근로자의 범위에 임시 및 일용 근로자가 포함되지만, 과세 단위(tax unit)를 기준으로 소득집중도를 구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과세 단위는 전체 근로자수에서 배우자가 있는 여자 근로자수를 제외하여 구한다(Piketty and Saez 2003). 이에 대해 일본은 한국과 같이 근로자 개인 단위로 소득집중도를 구했지만, 근로자의 범위가 상용근로자로 한정되어 있다(Moriguchi and Saez 2008). 따라서 소득집중도 수준의 엄밀한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 추이를 비교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그룹은 상위 10% 그룹을 다시 상위 0.1%, 1-0.1%, 10-1%로 나누었고,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그룹(즉 하위 90%)과 전체의 임금소득을 제시하였다. 각 그룹의 평균소득을 제시하되, 그 증가율을 비교할 수 있도록 로그 눈금으로 변환하였다. 먼저 전체 임금소득의 평균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상승하는 추세(1980년과 외환위기 때 감소를 수반)를 보였지만, 그 증가 추세는 특히 외환위기 이후 현저히 둔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그룹별 평균소득을 알 수 있는 1985년 이전과 1995년 이후의 대조가 뚜렷하다는 점이다. 1985년 이전은 최상위 그룹은 물론 하위 90%까지도 유사한 속도로 평균소득이 상승하였다. 그에 대해 1995년 이후는 상위 10% 그룹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지속하고 있는 반면, 하위 90% 그룹은 평균임금이 정체하는 대조를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임금소득의 동향이 소득계층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면서 분화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이 계층별로 소득 동향이 분화되는 현상은 특히 외환위기 이후 현저해졌는데, 거기에는 후술하듯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나타난 성과주의적 보상체계의 확산이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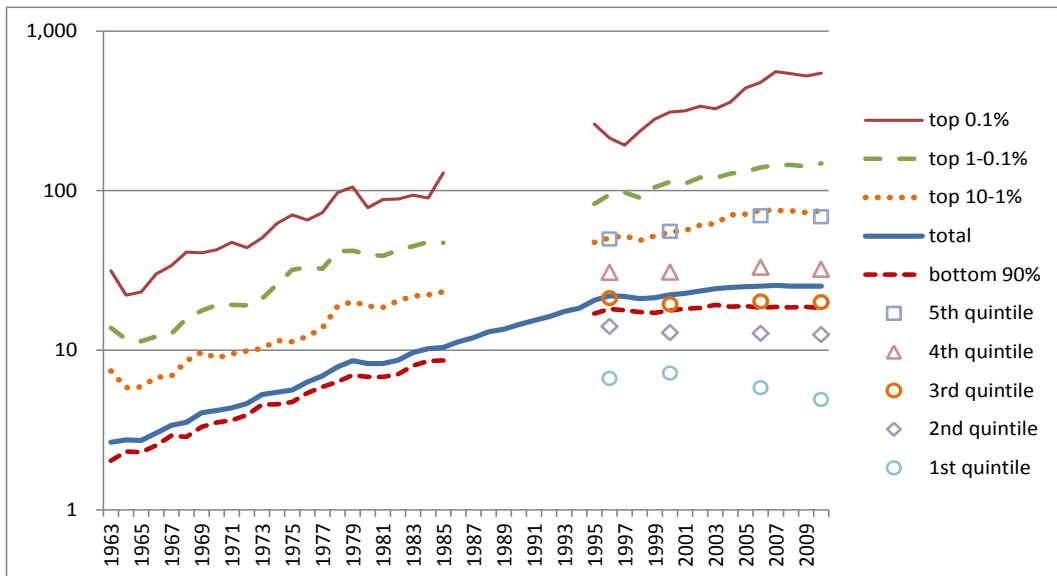
<그림 11> 소득 그룹별 1인당 근로소득(2000년 불변가격) 추이(단위: 백만원)



- 그런데 하위 90%의 소득분포는 어떻게 추이했을까? 소득세 자료는 상위 10%를 대상으로 이를 세분하여 소득의 실태를 보여주는데 장점이 있지만, 그 이하 소득자들이 어떻게 분포되었는지를 보여주지 못한다. 이에 비해 가계조사는 전체 가구의 소득분포를 보여 주지만, 샘플조사이기 때문에 소득그룹을 세분하여 보기 어렵고 특히 최상위 소득자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두 자료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보완하면 소득분포의 실상을 보다 잘 드러낼 수 있다. 두 자료를 결합하기 위해서는 가계조사를 개인 단위의 자료인 소득세 통계에 맞추어 재편할 필요가 있다. 가계조사는 가구 단위의 소득을 조사했지만, 가구 구성원의 소득과 그 종사상의 지위도 조사했기 때문에 이를 개인화하여 임금소득자를 추출할 수 있다(구체적인 것은 김낙년 2012b 참조).
- 근로소득세 자료와 가계조사에서 추출한 근로소득자 수를 소득세 자료의 소득구간에 맞추어 그 분포를 구해보면 전술한 <그림 4>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즉 중위 이하의 소득구간에서

근로소득세 자료의 인원수가 가계조사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데, 그것은 소득세 자료에서는 과세 미달자가 빠지기 때문이다. 상위 소득구간에서는 거꾸로 가계조사가 파악한 근로소득자수가 상당히 적는데, 그것은 가계조사에 적지 않은 누락이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는 전체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 가계조사의 근로소득자 통계를 취하되, 그들이 소득세 자료의 인원수에 미치지 못하는 상위 소득구간의 경우는 후자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두 조사를 결합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구한 전체 임금소득자를 대상으로 5분위 소득분포를 구했다. 이 5분위 분포는 전술한 상위 10%의 세분된 각 그룹의 소득 비중과 양립이 가능하다. 다만 여기서는 조사 커버리지가 일치하는 4개 연도(1996, 2000, 2006, 2010년)에 한정하여 비교하기로 한다. 이렇게 구한 5분위 각 그룹의 평균임금(2010년 가격)을 <그림 12>에 제시하였다. 상위 10%의 각 소득 그룹과 비교할 수 있도록 <그림 11>의 결과와 함께 제시하였다.

<그림 12> 소득 그룹별 1인당 근로소득 추이 (2)



- 그에 따르면, 1990년대 중엽 이후 소득분배와 관련하여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전체적으로 임금소득의 상승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상위 10% 그룹은 소득이 상승하였고(그것도 최상위로 갈수록 빨리), 1분위(하위 20%)와 2분위(하위 20-40%) 소득계층의 경우는 하락하였고, 그 사이 3-4분위(하위 40-80%) 계층의 경우는 정체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 결과 그래프에서 최상층(상위 0.1%)과 최하층(1분위)의 평균소득 격차가 1996년에 비해 2010년에 더욱 벌어져 부채꼴의 양상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계층별로 소득동향이 상승, 정체, 하락으로 분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그 이전의 고도성장기에는 성장의 효과가 저변으로 확대되고 있었던 것과는 대조되는 현상이며, 최근 15년간에 걸쳐 소득불평등이 급속히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IV. 전환점으로서 1990년대

- 우리나라에서 소득불평등 지표의 장기 추이를 보면 U자형을 보이는데, 해방 전후 시점과 함

게 1990년대 중엽이 단절적인 변화가 나타났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1990년 중엽의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⁹. 1990년대 중엽 이후는 소득집중도뿐만 아니라 궤절에서 살펴본 수정된 지니계수 또한 급속히 악화되었으며, 두 지표가 정합적인 변화 양상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배후에는 어떤 요인이 작용하고 있었을까? 여기서는 이를 충분히 밝히기 어렵지만,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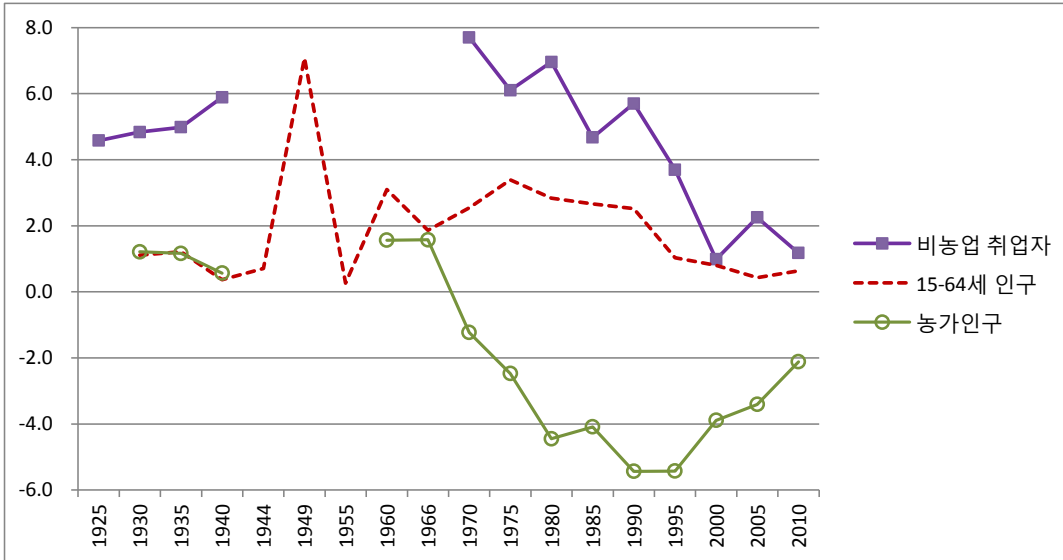
- 첫째, 경제성장의 효과가 얼마나 저변으로 확대되었는가에 관한 것이다. 한국경제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60년대 중엽 이후 30년간 고도성장을 지속하였지만, 1990년대 이후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기 시작했다. 같은 시기에 저축률과 투자율도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이것은 한국경제가 성숙 단계로 접어들면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워졌음을 뜻한다¹⁰. <그림 13>은 비농업 취업자와 농가인구 및 생산연령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의 장기추이를 보인 것이다. 먼저 고도성장기를 보면, 비농업 부문에서 고용 흡수력이 연평균 증가율이 4-8%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았고, 그에 따라 농가인구의 離農과 취업구조의 재편이 빠르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농가인구가 연평균 4-5% 감소를 지속한 결과 농촌에는 일손 부족이 심각(그 결과 농촌임금의 상승)해졌고, 부족한 일손을 대체하기 위해서 농업의 기계화 등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 결과 농업의 노동생산성이 상승(즉 농가소득의 증대)하게 된 것이다.
- 그런데 그 이전 시기를 보면, 이농과 함께 비농업 부문의 취업자 증가가 이미 전전부터 진행되어 왔지만 1960년대 말까지 농가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공업화의 초기 단계에서는 유발되는 고용 인원의 규모가 크지 않아 그것이 농촌에 미치는 충격에는 한계가 있다. 후진국에서 개발이 진행되더라도 종종 전통부문과 근대부문의 이중구조가 나타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전환시킨 것이 높은 고용흡수력을 수반하는 고도성장의 지속이었다. 비농업 부문의 고용이 빠르게 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평균임금도 꾸준히 상승하였다(그림 11 참조). 거기에 전술한 농촌의 변화와 농민의 소득 증가를 감안하

⁹ 소득집중도가 해방 전에 높은 수준에 있다가 해방 후 급격히 하락한 것도 주목되는데, 그 배후에는 식민지 지배 체제가 붕괴되고 당시 상위 소득층의 다수를 점하고 있던 일본인이 철수한 점과 농지개혁으로 지주계급이 몰락한 점을 중요한 요인으로 들 수 있다(Kim and Kim 2013).

¹⁰ 이를 규정한 장기적인 요인으로서 인구변천을 지적할 수 있다. 인구변천 과정은 인구 증가뿐만 아니라 연령구성의 변화가 수반된다는 점이 주목된다. 사망률 하락이 나타나는 첫 번째 국면에서는 특히 유아 사망이 줄면서 유년 인구가 급증한다. 두 번째 국면은 출생률이 하락하여 유년 인구의 증가가 둔화되는 반면, 늘어난 유년 인구가 생산연령으로 들어오면서 생산연령 인구가 크게 늘어난다. 마지막은 출생률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반면, 생산연령 인구가 고령화되는 국면이다. 이 중에서 두 번째 국면의 생산연령 인구의 증가는 생산 또는 저축이나 투자를 늘리는 효과가 크지만, 그 전후의 국면에서는 의존인구의 급증으로 거꾸로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이 벌어진다. Bloom and Williamson(1997)은 1965-95년에 걸쳐 특히 동아시아에서 이러한 인구변천의 효과가 이들 지역의 높은 성장률 중에서 1/3 정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동아시아의 '기적'은 인구변천의 국면이 바뀌면 사라지게 될 것으로 전망한 바가 있다. 한국의 경우 고도성장기는 인구변천의 두 번째 국면과 겹치면서 저축과 투자 그리고 경제성장률을 추가적으로 높이는 보너스(bonus)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인구구조가 거꾸로 경제성장률에 크게 부담(onus)이 되는 국면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면, 한국의 경제성장은 그 효과가 저변으로 확대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이 시기는 산업구조의 급속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소득의 집중도가 높아지지 않고 비교적 안정된 추이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3> 비농업 취업자와 농가인구의 연평균 변화율(%)



주: 1) 해방 전은 남한의 통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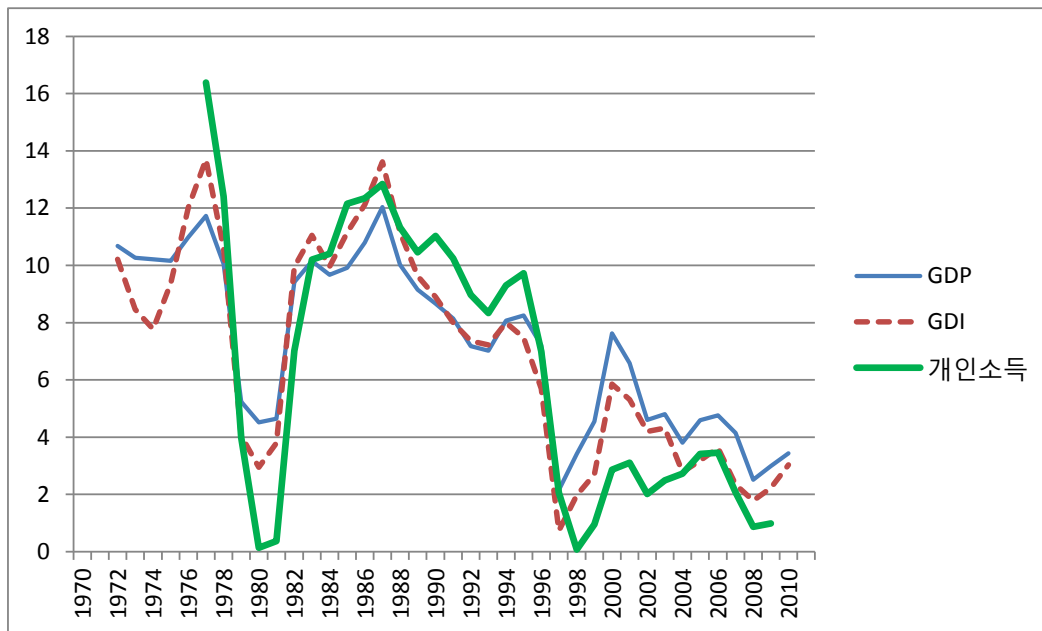
2) 농가인구 및 취업자는 5개년 이동평균값의 연평균 증가율이다.

자료: 『조선총독부통계연보』, 『한국통계연감』; 『경제활동인구연보』; 통계청(KOSIS).

- 그런데 <그림 13>에서 1990년대 중엽 이후를 보면, 비농업 부문 취업증가율이 크게 저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성장률이 저하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장 자체의 고용유발 효과가 크게 저하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산업구조는 종래의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고도화되었다. 이것은 대외개방으로 인해 더욱 촉진되는데, 특히 중국과의 수교(1992년)로 저임금 국가와의 교역이 확대됨에 따라 산업구조의 재편 압박이 커졌다. 예컨대 제조업에서 중국과의 교역으로 시장이 확대되어 고성장을 누리는 업종이 있는 반면, 중국과 경쟁이 되지 않아 도태되거나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업종이 나타났다. 전자에서는 고용이 늘었지만, 후자의 고용 감소를 만회하지는 못했다. 그러다 보니 종래 고용증대를 주도해 왔던 제조업이 1990년대 중엽 이후에는 오히려 고용을 방출하고 있다. 요컨대, 1990년대 이후 저임금 국가와의 교역 확대를 포함한 세계화(globalization)의 심화는 우리나라 산업에서 숙련 편향적 기술변화(skill biased technical changes)를 가속하였고, 그 결과 근로자간의 소득격차가 확대되었다.
- 둘째, 앞에서 경제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을 지적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개인소득의 성장률 둔화는 외환위기 이후 더욱 두드러졌다. <그림 14>에는 GDP, GDI(국내총소득), 개인소득의 증가율 추이를 보여주는데, 먼저 GDP와 GDI의 갭은 교역조건 악화에 의한 것이다. 그 갭이 시기에 따라 일시적으로 악화와 개선을 반복하고 있지만, 특히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그 갭이 지속적으로 벌어져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가장 큰 이유는 수출에서는 IT 제품(생산성 향상으로

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의 수출 비중이 높다는 점과 수입 원유의 가격상승 때문이다. 그 다음 GDI¹¹에 비해서도 개인소득의 증가율은 상당히 뒤쳐져 있다. 이것은 전체 소득에서 법인에 귀속되는 몫에 비해 개인소득의 증가가 더딘 때문이다. 이 현상이 두드러진 것은 1980년 위기 때이지만, 곧 회복되었기 때문에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1998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그 갭이 크고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경제성장에 비해 개인이 소득증가를 좀처럼 체감하지 못한 것은 그 때문이다. 이처럼 전체 개인소득의 증가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림 12>에서 보았듯이 상위 계층의 빠른 소득 증가율이 지속되었다는 것은 그 이하 계층의 소득이 정체 또는 감소하였을 것임을 시사한다.

<그림 14> GDP, GDI 및 개인소득의 증가율 추이(단위: %, 3개년 이동평균)



자료: 한국은행(EC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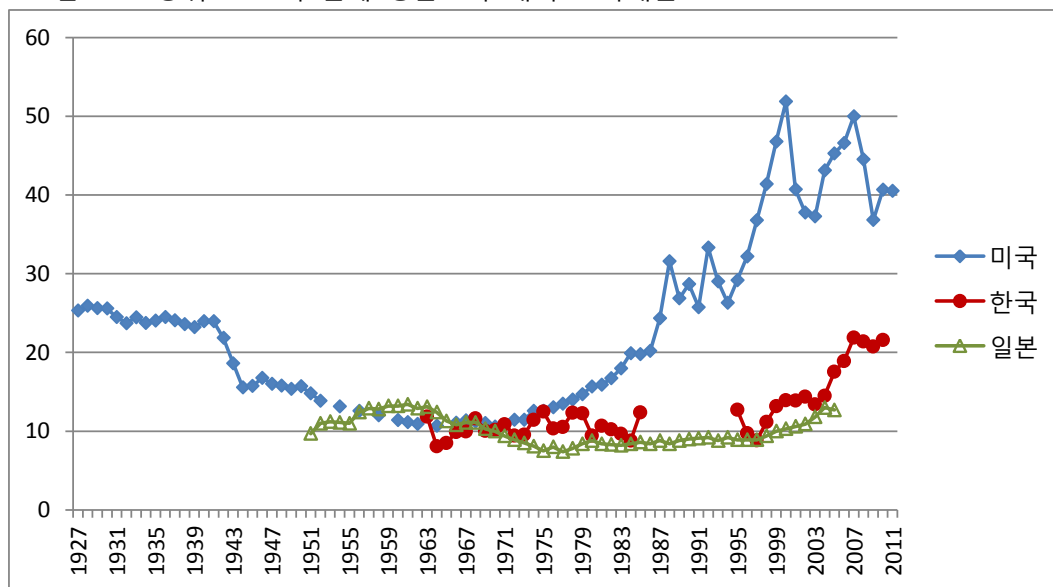
- 그런데 이상에서 언급한 요인들은 전체 계층을 포함하는 소득분배 지표(예컨대 지니계수)에는 영향을 주지만, 예컨대 상위 0.1%와 같은 최상위 소득의 동향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 아래의 두 가지 요인을 추가로 고려한다.
- 셋째, 외환위기 이후 기업지배 구조의 변화와 성과주의 보수체계의 확산을 들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를 계기로 기업경영 시스템이 개편되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영미식 지배구조가 도입되었다(정구현 외 2008: 156-189). 기업 자금의 조달이 종래의 은행 중심에서 자본시장 쪽으로 옮겨감에 따라 기업경영에서도 종래에 비해 자본시장에서 평가되는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거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러한 변화 요구는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참여 확대로 더욱 강해졌다. 한편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사업 내용의 복잡화·전문화·첨단화가 진행됨에 따라 전문경영인의 역할이

¹¹ GDI 대신에 거기에 국외순수취 요소소득을 더한 GNI를 비교해야 하지만, GDI와의 차이가 미미하여 <그림 14>에는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커졌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집단(재벌)에서는 소유경영자와 전문경영인의 역할 분담이 나타났는데, 소유경영자는 계열사(또는 사업부)의 경영을 전문경영인에게 일임하는 대신,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보상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기업 CEO와 임원에게는 경영의 책임과 함께 파격적인 보상과 스톡옵션이 주어졌다. 이것은 대기업집단 내부에서 계열사(또는 사업부)간의 경쟁을 통한 CEO 시장이 형성되었음을 뜻한다. CEO뿐만 아니라 그 이하의 직원에 대한 보상체계에서도 종래의 연공주의 방식 대신에 연봉제와 인센티브제와 같은 성과주의 방식이 외환위기 이후 빠르게 확산되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정구현 외 2008: 248-259).

-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미국의 Forbes과 같이 기업 경영진의 보수를 장기간에 걸쳐 조사한 자료를 얻기 어렵기¹² 때문에 성과주의적 보수체계의 확산을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하기는 어렵다. 여기서는 그 대안으로서 근로자 상위 0.1%의 소득이 이들 CEO 또는 거기에 준하는 고소득층의 보수 동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10년의 경우 16,971명이 거기에 해당하는데, 그 중에는 주요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CEO나 임원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15> 상위 0.1%의 전체 평균소득 대비 소득배율



자료: Piketty and Saez(2003); Moriguchi and Saez(2008); 김낙년(2012b).

- <그림 15>는 이들 상위 0.1%가 전체 근로자 평균소득의 몇 배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는지를 보여주며, 그것을 미국 및 일본과 비교하였다. 1960년대 말에는 세 나라 모두 그 소득 배율이 10배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는데, 미국은 1970년대 이후 상승하기 시작하여 1990년대

¹² 근래에는 상장기업의 임원보수 등에 관한 간략한 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으로 얻을 수 있지만, 1999년 이후로 한정되며 이를 집계하여 임원보수의 일관된 시계열을 만드는 일도 쉽지 않다.

말에는 40배를 넘는 수준으로까지 급등하였다¹³. 이에 비해 일본은 10배 전후의 수준을 유지하다가 근래에 약간 상승(13배)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두 나라 사이에 이렇게 뚜렷한 대조가 나타난 것에 관해서 Moriguchi and Saez(2008)는 기업 경영자의 선발을 둘러싼 외부 노동시장의 발달 여부를 중요한 요인으로 들고 있다. 즉 미국 기업의 경우 경영자는 주로 경쟁적인 외부 노동시장에서 선발되며, 특히 스타(star) 경영자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하다. 그에 대해 일본에서는 범용적인 기술보다는 해당 기업에서만 사용되는 기술(firm specific human capital)을 중시하며, 기업 경영진도 대부분 내부에서 승진한 자들로 채워지기 때문에 경쟁적인 외부 시장이 발달되지 못했다. 일본의 기업별 노조와 같은 제도도 기업 내 임금격차의 확대를 막은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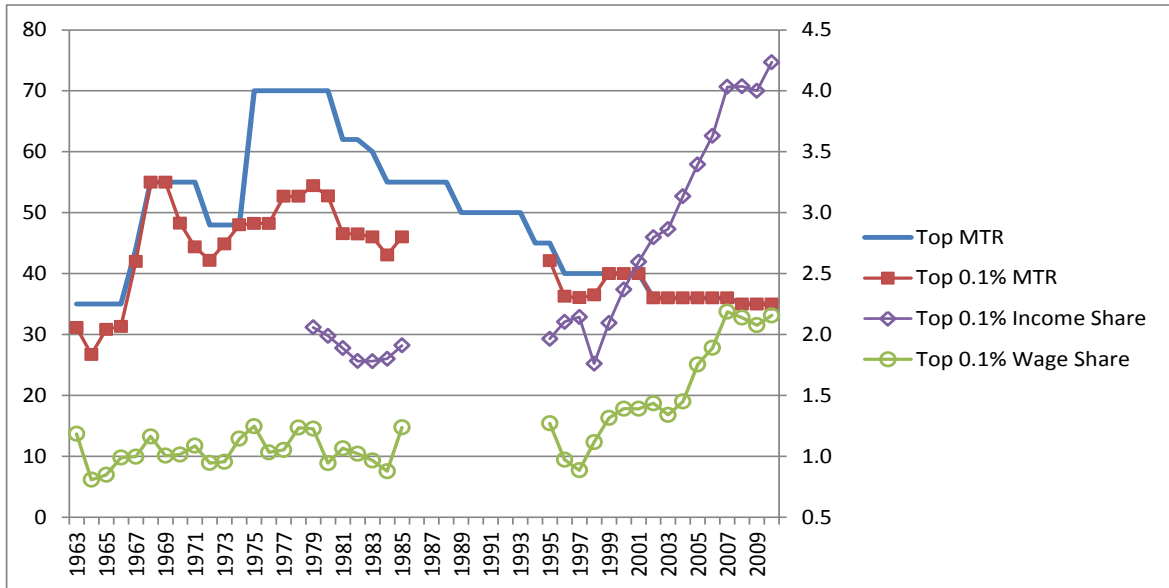
-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가? 근로소득자 상위 0.1%의 보수는 1990년대 말까지 전체 근로자 평균의 10배 전후의 수준을 유지하였지만, 외환위기 이후 급등하여 최근에는 20배가 넘는 수준으로까지 늘어났다. 그 소득의 수준이나 증가 속도에서 일본과는 달라진 경로를 밟고 있으며 미국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선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는 외환위기 이후 전술한 성과주의적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업경영 시스템이 바뀐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특히 대기업집단 내부에서 계열사간의 경쟁을 통한 CEO 시장이 형성된 점이 주목되는데, 이것은 CEO 시장의 범위와 그 보수 인센티브의 활용이라는 점에서 미국과 일본의 중간적 형태라고 할 수 있다.
- 넷째, 조세정책도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상층 소득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세율구조가 변화된 점을 들 수 있다. <그림 16>에서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최고 세율의 추이를 보면 1960-70년대는 빠르게 상승하여 70%의 정점에 도달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최근에는 그 절반으로까지 떨어졌다¹⁴. 1980년대 이후 미국(레이건 정부)이나 영국(대처 정부)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추진되고 소득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조세정책이 당시 세계적인 조류가 되었는데,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런데 이 최고 세율은 실제 그 세율로 소득세를 납부하는 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지 못한다. 여기서는 매년의 소득세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 상위 0.1%의 납세자가 실제 직면하게 되는 한계세율(Marginal Tax Rate)을 추계하여 함께 제시하였다¹⁵.

¹³ 미국의 경우 상위 0.1%는 10만명에 달하는데 그 범위를 최상층으로 좁히면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Piketty and Saez(2003: Figure 11)에 따르면, 1970년 이후 30년간에 걸쳐 예컨대 상위 100대 CEO들의 평균수입은 150만 달러 이하 수준에서 4000만 달러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급등(Forbes의 800대 기업 CEO 연간수입 조사)하고 있다. 그 사이 전체 근로소득자의 평균 소득(국민계정에 의거)은 3-4만 달러(1999년 불변가격) 수준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전체 평균에 대한 소득배율은 대략 50배에서 1000배로 늘어난 셈이 된다.

¹⁴ 여기서 제시한 최고 세율은 임금소득을 대상으로 구한 것이다. 종합소득세가 시행된 기간에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세율의 차이가 없지만, 그 이외 기간에는 차이가 있다. 그 경우 임금소득에 부과된 세율을 이용하였다.

¹⁵ 상위 0.1%의 한계세율을 추계하는 방법은 Moriguchi and Saez(2008: Appendix C.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했다. 먼저 각 소득그룹(0.01%, 0.1%, 1% 등)의 경계소득에 해당하는 가구가 직면하게 되는 한계세율을 구한다. 이 때 4인 가구(임금소득만을 가지고 있는 가구주, non-working spouse, two

<그림 16> 상위 0.1%의 소득집중도와 한계세율(MTR)



주: 소득집중도는 오른쪽 눈금, 한계세율은 왼쪽 눈금, 단위는 모두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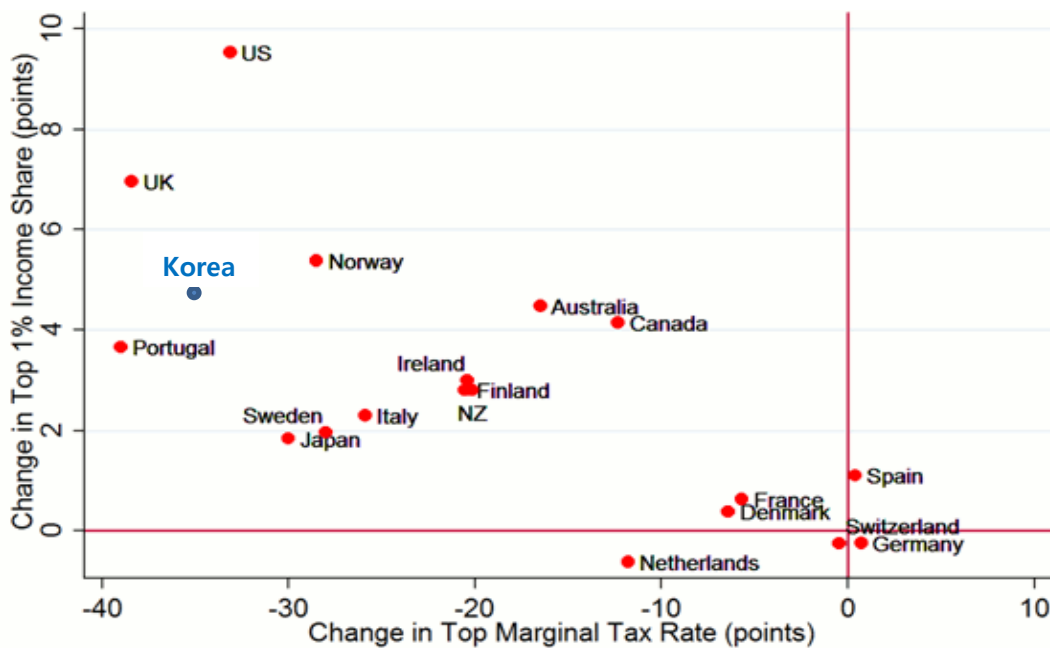
- 그에 따르면 소득 상위 0.1% 그룹의 납세자가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MTR은 최고 세율과 다소 갭이 벌어져 있지만, 1970년대 말의 54%를 정점으로 계속 하락하여 최근에는 35%로 떨어졌다. 이러한 한계세율의 지속적인 하락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이론적으로는 상층의 생산활동의 인센티브를 높여 실제로 소득을 늘리는 효과(소위 supply side effect)를 기대할 수 있다. 또는 탈세가 줄거나, 상대적으로 세율이 높은 소득(예컨대 corporate income)이 개인소득으로 형태를 바꾸어(pass-through) 신고된 소득금액이 늘어나기도 한다(Matthews 2011). 기업의 CEO의 경우 소득세율이 낮을수록 자신의 소득을 올리기 위한 rent seeking이 강화될 수도 있다(Piketty, Saez, and Stantcheva 2011). 나아가 낮은 세율로 저축여력이 커지면 부의 축적을 통해 capital income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¹⁶. 한국에서 어느 효과가 얼마나 더 중요하게 작용했는지를 밝힐 수는 없지만, 지난 15년에 걸쳐 소득집중도가 급속히 상승한 배후에는 MTR의 지속적 하락이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생각된다. 같은 논리로 그 이전에 MTR이 상승하거나 높은 수준에 있었던 시기에는 거꾸로 소득집중도의 상승을 저지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dependent children)을 상정하고 매년의 세법에 따라 인적 및 근로소득 공제를 한 과표와 그 해의 소득구간별 tax schedule을 이용한다. 그리고 상위 0.1%에 속하는 납세자를 다시 상위 0.01%와 0.1-0.01%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의 평균 한계세율을 각 그룹의 소득액으로 가중 평균하는 방식으로 상위 0.1%에 속하는 평균적인 납세자의 한계세율을 도출하였다.

¹⁶ 한국의 경우 <그림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소득 집중도가 상승했지만, 자본소득(capital income)을 포함한 그 외의 소득의 집중도가 더 빨리 상승했기 때문에 이 효과가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에 대해 미국의 경우 거꾸로 근로소득이 소득집중도의 빠른 상승을 주도하였기 때문에 이 효과는 크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 MTR의 하락과 소득집중도의 상승 사이의 긴밀한 관계는 국제비교에서도 확인된다. <그림 17>은 Piketty, Saez and Stantcheva(2011)에 의거하여 자료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략 1975-79년과 2004-08년 사이에 각국의 Top MTR의 변화와 상위 1%의 소득(pre-tax 기준) 비중의 변화(각 % points)간의 관계를 보인 것이다. 이 기간 동안에 MRT가 크게 낮아진 나라일수록 소득집중도의 상승이 더 빨랐다는 관계가 드러난다. <그림 17>에는 본고의 추계 결과에 의거하여 한국의 위치를 추가로 그려 넣었는데, 그에 따르면 한국은 제시된 OECD 국가 중에서 미국이나 영국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대체로 그에 가까운 변화 양상을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7> 1970년대 이후 상위 1%의 소득비중과 한계세율의 변화



Sources: Piketty, Saez and Stantcheva(2011); 본고의 추계.

V. 맺음말

- 이상의 논의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계조사에 의거한 통계청의 소득분배 지표는 불평등도의 수준과 추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상위 소득자의 누락과 금융소득 등의 과소 보고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를 보정할 경우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지표는 상당히 달라진다. 예를 들면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2010년에 0.339에서 0.415로 높아지고, 가처분소득 기준에서는 0.308에서 0.371로 높아진다. 이 수준은 OECD 국가 중에서는 칠레, 멕시코, 터키, 미국에 이어 5번째로 불평등도가 높은 나라가 된다. 그리고 1996년의 지니계수는 0.302였으며 OECD 국가 중에서 중간 정도의 순위에 속했는데, 1996-2006년간에 급등하였다. 2006-2010년간에는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다소 상승했지만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는 약간 하락하였다.

- 둘째, 소득세 자료에 의거하여 상위 1% 또는 0.1%의 소득집중도를 추계했는데, 해방 전에는 높은 수준이었던 것이 해방 후 급락하여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안정되었다가 1990년대 중엽 이후 다시 급상승하는 U자형의 양상을 보였다. 다른 선진국도 대체로 유사한 추이를 보였는데, 1980년대 이후 소득불평등이 크게 확대된 영미형과 이전의 낮은 수준을 대체로 유지하고 있는 유럽·일본형으로 분화가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현재 양자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에서 1990년대 중엽 이후 소득집중도가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앞에서 수정된 지니계수의 추이와도 정합적이다.
- 셋째, 1990년대 중엽 이후 소득불평등의 심화를 가져온 요인 또는 배경으로서 다음의 네 가지를 들었다. 한국경제가 고도성장에서 저성장 단계로 들어섰을 뿐만 아니라 저임금 국가와의 교역 확대를 포함한 세계화의 진전과 숙련편향적 기술변화로 고용증가가 둔화되고 근로자간의 소득격차가 확대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개인소득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에 크게 못 미친 것도 성장효과가 저변으로 확대되지 못함을 보여준다. 그 외에도 특히 최상층으로 소득집중을 높인 것으로서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경영 시스템의 변화로 성과주의 보수체계가 확산된 것이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1980년대 이후 최고 세율이 계속 하락하여 상위 소득자가 직면한 한계 세율이 크게 낮아진 것도 그들의 소득비중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참고문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통계청 『가계금융조사』, 각 연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통계청 『가계자산조사』, 각 연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통계청(1996; 2000) 『가구소비실태조사』.

통계청 KOSIS (http://kosis.kr/abroad/abroad_01List.jsp)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시스템 (<http://mdss.kostat.go.kr/mdssex>)

한국은행 ECOS (<http://ecos.bok.or.kr>)

김낙년(2012a), 「한국의 소득집중도 추이와 국제비교, 1976-2010: 소득세 자료에 의한 접근」, 『경제분석』 18(3), 75-114.

김낙년(2012b), 「한국의 소득불평등, 1963-2010: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경제발전연구』 18(2), 125-158.

김낙년·김종일(2013), 「한국 소득분배 비표의 재검토」, 낙성대경제연구소 워킹페이퍼(근간).

정구현 외(2008), 『한국의 기업경영 20년』, 삼성경제연구소.

Bloom, David E., Jeffrey G. Williamson(1997), "Demographic Transitions and Economic Miracles in Emerging Asia," NBER Working Paper 6268, 1997

Kim, Nak Nyeon and Jongil Kim(2013), "Income Inequality in Korea: 1933-2010: Evidence from Income Tax Statistics," Paper presented at the Asia-Pacific Economic and Business History

Conference, Seoul, Korea.

Matthews, Stephen(2011), "Trends in Top Incomes and their Tax Policy Implications," in OECD, *Divided We Stand: Why Inequality Keeps Rising*, OECD Publishing.

Moriguchi, Chiaki, and Emmanuel Saez(2008), "The Evolution of Income Concentration in Japan, 1886-2005: Evidence from Income Tax Statistic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0(4), 713-734.

OECD(2011), *Divided We Stand: Why Inequality Keeps Rising*, OECD Publishing.

Piketty, Thomas, and Emmanuel Saez(2001), "Income Inequality in the United States, 1913-1998," NBER Working Paper, No. 8467, Appendix, 34-52.

Piketty, Thomas, and Emmanuel Saez(2003), "Income Inequality in the United States, 1913-1998,"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8(1), 1-39.

Piketty, Saez and Stantcheva(2011), "Optimal Taxation of Top Labor Incomes: A Tale of Three Elasticities," NBER Working Paper 17616.

The World Top Incomes Database(<http://g-mond.parisschoolofeconomics.eu/topincomes>)